이재명 "깔끔하게 정리"…광주 공항이전 급물살 주목

국가주도·합리적 보상 등 제시
시도지사 "의미있는 공약" 환영
무안 "일방적 희생 강요" 신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 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주도' 해결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답보 상태인 이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유세에서 광주공항 문제와 관련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조정해 신속히 공항을 옮기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해 반드시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용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 지역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며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고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이 후보가 △국가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으로 갈등 조정 △무안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3원칙' 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광주 유세를 통해 군공항 이전 입장을 밝힌 것은 우리로서는 고민을 풀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후보들도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광주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 설득 등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말 그대로 공약일 뿐이고, 대선 이후에나 논의될 사안"이라며 "광주공항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고만 되어 있어 대구군공항 이전 사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통 크게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소수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군도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선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무안군과 긴밀히 협의에 나서 세 지자체가 공동의 행보를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민주 기후대응위, 전남 재생에너지 '경청투어'

영광 해상풍력 등 방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9일 "전남지역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살피는 '재생에너지 경청투어' 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영광의 광백 태양광발전소, 낙월 해상 풍력발전소,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등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의 기후공약이기도 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 추진되는 현장을 살폈다.

광백 태양광발전소는 100MW급의 태양광 발전 단지로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도 함께 조성돼 있다.

낙월 해상 풍력산업의 경우 주민이 직접 수익을 배분받는 '바람연금' 모델 실현을 논의 중이다. 전남 소재 19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낙월 해상 풍력측은 해상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항만시설 확충,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공적 보증, 국책은행의 적극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성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인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의 열쇠"라며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기후복지 정책이자 기본사회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민주, 이재명 겨냥 네거티브에 고소·고발 맞불

'커피 원가 120원' 공세 등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자 허위·왜곡엔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이나 마타도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선대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 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 는 취지로 언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후보로서 굳이 '진흙탕 싸움' 을 벌이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후보에 대한 공세는 당이 법적 대응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과는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 말하는 걸 왜곡이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 공직선거법이 나는(이 후보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된다는 거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민주당이 선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 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유효한 만큼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그 조항은 유효한 거고,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걸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법이 살아있는 이상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50.2% 압도적 선두…김문수 35.6%·이준석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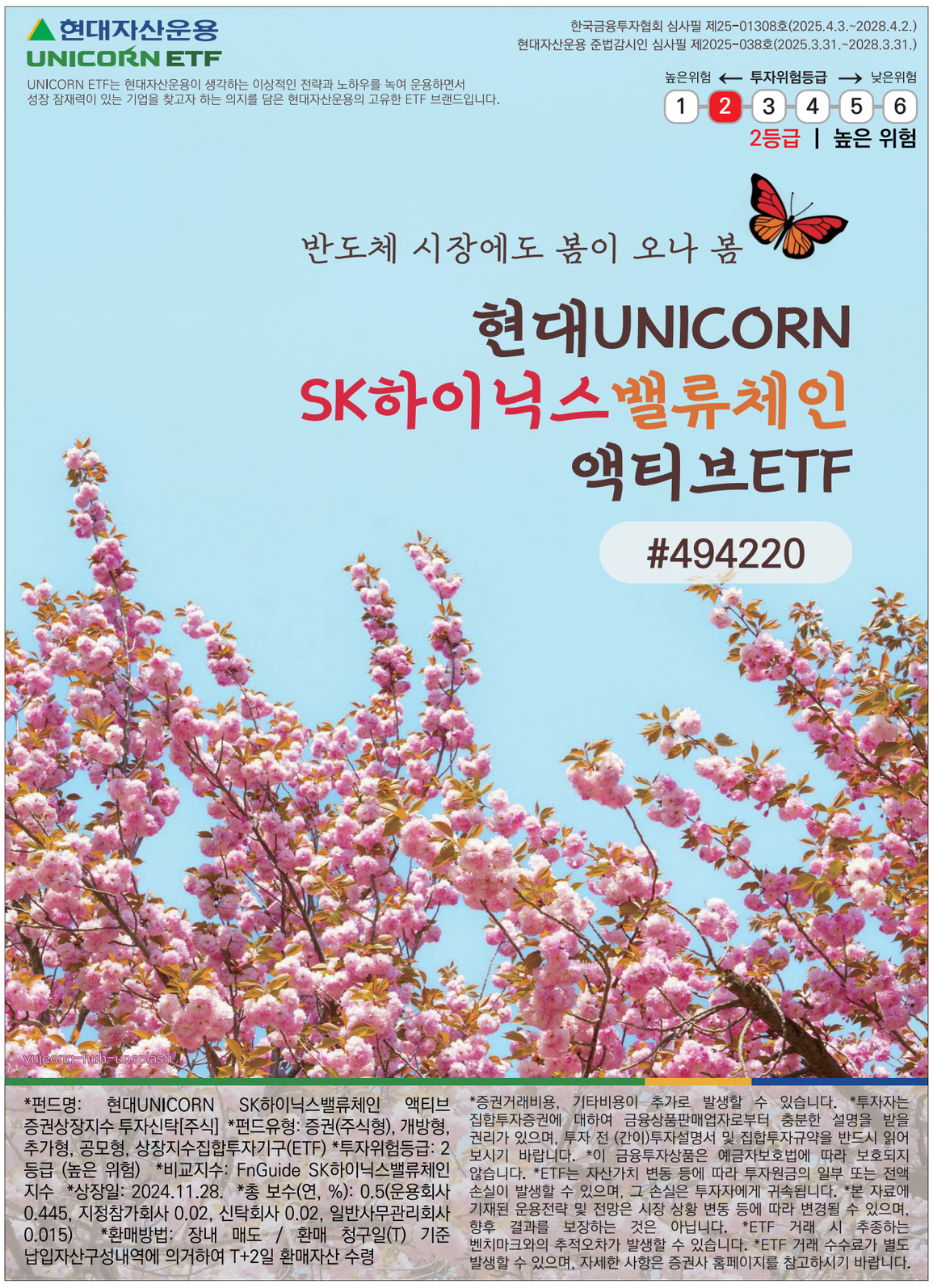
TK서도 오차범위내 경합

차기 대선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5%p, 이준석 후보는 2.4%p씩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김문수 44.9%, 이재명 43.5%로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9.0%였다.

가상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재명 51.4%, 이준석 30.0%였다. 연합뉴스